

국제정치의 서구 중심적 세계관은 극복될 수 있는가?

브런치 짱구

목차

1. 서구 중심적 세계관이란?
2. 왜 서구 중심적 세계관은 극복되어야 하는가?
3. 최근의 국제 질서 속 미국의 위상은 어떠한가.
4. 일극 체제에 대한 BRICs 중심의 도전은 성공될 수 있는가?
5. 비판점 및 결론.

요약

과거 무력침탈 제국주의 질서는 ‘노동력과 토지 및 화폐’가 상품으로 규정된 자본제 일주의로 전환됐다. 이는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하여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는 파국에 치달는 듯했으나 기축통화국의 특권을 통해 일시적으로 부채를 유예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급부상과 러시아의 다극질서를 향한 외침이 설상가상 일어남에 따라 기존의 세계 질서에 큰 위협이 되는 듯하다. BRICs를 중심으로 세계가 개편될 수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 BRICs의 최근 동향을 짚어보고, 양강 체제가 구축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비판하며 글을 끝맺을 것이다.

1. 서구 중심적 세계관이란?

베스트팔렌 조약 직후 대략 400여 년간 국제사회의 주체로서 개별 국가는 세계 무대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했으며, 지정학적으로 사회 발전을 이룩하기에 적합한 강대국들은 식민지배를 통해 안보(국력) 증강에 몰입했다. 19세기 유럽의 제국주의는 비서구권에 대한 '문명화의 사명'을 무력침탈로써 자행했다. 이후 직접 식민지배보다 더 효율적인 '간접 지배' 방식으로서 '자본 제일주의'가 새로운 지배 양식으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가치('정치·군사·문화')가 '정상성'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정상으로서 당위를 지속하기 위해 비서구권에 대한 통제가 경제적 관리로 이어졌다. IMF에 따르면, 2006년 73개 개도국의 대외 부채에 있어 중국은 2%, 서방의 채권단('파리클럽'¹⁾)이 28%를 차지했다. 다만 서구의 지배력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헐거워졌다. 2020년에는 중국이 73개 개도국 대외 부채의 18%, 파리클럽은 10% 차지했다. 2007년부터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서방의 간접 지배 양상은 완화되는 듯 보이지만, 2차 세계 대전 직후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및 미국의 '국가독점자본주의(71년 변동환율제 이후)'가 지금까지의 지배적 이념인 것은 분명하다.

2. 왜 서구 중심적 세계관은 극복되어야 하는가?

현재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관점에 있어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도 차이가 있으나 '미국의 우방국'과 '그 외'의 국가들로 양분했을 때에도 서로 견해가 다르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따르면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만이 러시아를 맹비난하고 있으며 12개국은 러시아의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 127개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소속 진영이 불분명'한데 이는 단순히 '중립'을 넘어 '다극 체제' 혹은 '양극 체제'가 도래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미국의 일극 체제에 직접 대항하는 '중국·러시아'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중립국'²⁾은 최근 다양한 이슈에 있어 미국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용주의를 표방해온 인도는 '파키스탄'에 무기를 공급하는 중국과 절대적 친교를 맺을 수 없었으나 2021~2022 회계연도에 이르러서야 미국과의 무역이 중국과의 무역을 추월할 만큼 경제적 차원에서는 그동안 중국과 높은 의존 관계를 맺어왔다. 또한 당파성보다 실용성을 논해온 인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의 무역에 있어서 여전히 중국과 함께 가장 많은 교역을 하고 있다. 쿼드에 종속되지 않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교역을 지속하고 있는 '최대 민주주의 국가'는 앞으로 세계 질서 변화에 있어 주요한 변수로 간주 될 것이다.

작금의 구축된 세계 질서에 국제무대 행위자들은 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현재 '서구 중심적 세계관'은 과거 다수의 강대국에 의해 현상 변화 기회가 빈번했던 것과 달리 미국 주도 글로벌 정치·경제 시스템(글로벌 식민성³⁾)으로 설명된다. 패권국의 일방적 세계 이데올로기는 '안정'이 아닌 '정체 및 불변의 위계질서'를 공고히 했

1) 국가 간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채권국들의 협의체, 2016년 한국은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2)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특정 블록에 종속되지 않은 중견국

3) 「진정한 글로벌 가치란?」(박치완, 2018) p242

다.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가장 효용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 ‘신자유주의’는 개성의 침식을 초래했으며, 인간 스스로가 제어 불가능한 욕망을 자극해 ‘낭비적 소비’를 조장했다. 더불어 ‘공정한 경쟁’ 자체에 매몰되어 ‘경쟁의 목적’을 망각하게끔 세계를 왜곡시켰다.

국가를 ‘개체’로, ‘종’을 ‘지구촌’에 빗대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성’ 과 ‘이타성’ 개념 간 관계를 토대로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애주의, 이타주의, 수오지심 등 **개체**의 반(反) 이기적 감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리처드 도킨스는 ‘종’ 이기성을 근거로 한다. 이를 미루어 보면, 국가는 환경과 ‘인권’(혹은 주권)을 가꾸어나가는 것 역시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있으며, 개별 국가의 ‘타고난’ 이기성과 지구촌 세계의 ‘의도된’ 목적은 상호보완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서구 중심적 질서가 비서구 국가들의 ‘호소’를 묵살한다면, 지구촌 ‘전체의 발전’이 더디게 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며 이는 곧 기존 질서의 전복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하인리히 법칙’⁴⁾이 타당하다고 믿는다면, 지구촌 사회의 불협화음이 단순한 경고음이 아님을 인지하고 문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결국 ‘정당성을 잃은 경쟁은 그 자체로 참가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믿음’⁵⁾을 훼손시킴으로써 ‘신자유주의’는 더이상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지고의 수단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우려를 양산할 것이다.

3. 최근의 국제 질서 속 미국의 위상은 어떠한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23년 1분기 디폴트를 선언한 회사는 20년 4분기 이후 가장 많다. 개별 회사뿐만 아니라 ‘개도국’ 차원에서는 잠비아·스리랑카의 디폴트가 최근에 선언됐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원자재 및 식량 수입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에 노출된 여타 개도국들도 연쇄 파산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⁶⁾ IMF는 개도국 73곳 중 41곳(56%)이 사실상 디폴트 초입에 들어갔다고 밝혔으며, 세계은행은 23년 내 채무 상황을 지속할 수 없는 개도국이 12곳 정도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 및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기대한 데서 기인한다. 2020년 대외 채무가 24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급증한 점을 미루어 보아 실질적으로 ‘가치 창출’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과도한 투자’가 디폴트 기폭제로 작용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부채는 미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의해 도미노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과거 94년도 ‘멕시코의 디폴트’ 직전의 경과와 마찬가지로 개도국들의 경상수지 악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 ‘달러’ 부채보다 ‘위안화’ 부채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당연히 ‘서구 중심 질서’에 저항할 수 있는 ‘자발적’ 중화에 접어들 수도 있다. ⁷⁾

특히 미국의 현재 본원통화량은 8조 6147억 달러에 이르며, 미국채 발행한도 31조

4)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

5) 롤스의 차등 원칙,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에 대한 신뢰

6) 파키스탄, 이집트, 튀니지, 페루, 엘살바도르, 가나, 에티오피아 등

7) 중국과 수교를 추진하는 온두라스는 관계 수립 82년 만인, 3월 25일 대만과 외교 관계 공식 단절

4천 억 달러는 이미 23년도 1월 19일을 기점으로 초과된 탓에 미국이 개도국의 부채를 떠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2008년 12월부터 2014년 3분기까지 미국은 공황 발생을 우려하여, 비전통적 통화정책(양적 완화)을 3차례 단행했으며, 모기지 채권(1조 7500억 달러)과 국채(1조 7천억 달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M2는 2016년 4조 5455억 달러로 늘어났다. 코로나 19 직후 또 한 번의 양적 완화를 집행하여 롤오버⁸⁾된 미국채는 발행량이 한도를 초과하게 됐고, 미 의회는 1960년 이래 79번째 부채한도 상향을 앞두고 있다.⁹⁾ 따라서 미 의회는 국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중국 중앙은행이 작년부터 눈에 띄게 미 국채를 매도하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공개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행태까지 고려하면 미국은 달러패권을 지속하기 위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다만, 과거 1980년 이후 미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1년 이내에 5차례 모두 공황이 발생했다¹⁰⁾는 점, 그럼에도 미 연준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예정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온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국내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도전국’에 의한 패권 전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자명하다. 미국의 국채 발행 한도 초과 시점과 세계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BRICs 회원국 간의 연대는 긴밀해질 수 있을까?

4. BRIC's'를 중심으로 미국의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미국의 달러 지배는 흔들리고, 미국의 독점자본주의 붕괴로 이어진다면 BRICs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블록화될 수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서 ‘실용주의’ 표방국이 어느 입장을 취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위기와 더불어 개도국의 경제침체 상황으로 인해 이들 간 연대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중국과의 친교에 있어 장애로 인식되던 파키스탄이 IMF 구제금융을 요청함에 따라 인도는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국유상업은행 및 정책 은행으로부터 고리(高利)¹¹⁾ 대금을 차입한 탓에 2019년부터 IMF와 구제금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23년 4월 14일 금융 지원 재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서구권의 자본이 국내로의 유입이 기정사실화됐다. 머지않아 ‘부패방지 및 민주화’ 등 서구의 가치 및 문화에 사회 분위기가 동화될 것이다.

인도는 ‘부채의 덫’에 놓인 주변 개도국과 달리 지속적인 경제 성장 동력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넘어 인도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권위주의 국가와의 직접적인 관계 진전을 통해 성장의 박차를 도모하고 있다. 러시아 전쟁 직후 ‘밀월’ 관계였던 러시아와 대외적으로 협력 관계를 공표하고 있다. 러시아-이란-인도를 잇는 INSTC¹²⁾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공식화’ 등 러시아의 서방 제재 우

8) 롤 오버(Roll-Over)는 채권이나 계약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의미

9) 17일(현지시간) 미국 3개월물 국채 570억 달러는 금리 5.15%로 발행됐다. 금리 수준은 지난 2001년 1월 이후 22년여 만에 최고치_출처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10) 23년 4월 18일 기준 미 국채 2년물은 4.17% 10년물은 3.57%

11) 2007년부터 2017년 간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165개국에 843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진행. 세계은행(WB)과 아시아인프라은행이 이율이 1% 수준인 데 반해 중국의 국유상업은행과 정책은행은 2.5% 수준_출처:<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976>

회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다. 게다가 22년 12월 모디 총리와 푸틴은 'FDI, 에너지, 농업, 교통, 물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논의했으며, 4월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양국의 FTA 체결을 위한 사전 논의가 뉴델리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향후 OPEC+의 수장인 러시아와 사우디가 위안화를 석유 결제 통화로서 공식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면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경제 블록화 공식화가 선언될 것이고 인도의 성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예견된 인도의 행보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서방 제재 우회' 계획을 살펴보면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러시아의 '거시경제분석 및 단기 예측센터'에서 전망하는 러시아의 경제발전 시나리오 중 '성장을 위한 투쟁'(국제환경 속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러시아 경제 현대화 이행)은 '반미 혹은 다자주의 지향'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다극주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주변국의 지원을 통해 대러 제재를 효율적으로 우회해왔다. 러시아는 22년 2월부터 3월 초순까지 11,300여 회의 서방 경제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22년 세계 GDP 9위를 기록했으며 21년 대비 22년 명목 GDP 성장률은 '-2.2%'에 그쳤다¹³⁾. 특히 에너지 수출 제재는 인도·중국 등 BRICs 회원국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14년도부터 서방의 제재에 노출된 러시아는 중국과 19년도부터 '시베리아의 힘'을 개통하여 LNG 장기(30년)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22년도 9월부터는 독일과의 가스관 사업 협력을 중단하고 '시베리아 힘2'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2월 러시아 재무부는 국부펀드의 자산 보유 비중을 개정함으로써 달러, 유로, 엔 등 서방의 자산을 배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¹⁴⁾

(중남미 최대 경제국)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취임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택하였는데, 3월 29일 브라질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결제통화망 'CIPS'를 통해 'SWIFT'를 대체하겠다고 중국과 합의했다. 21년도 국제무역결제 대금의 2%에 불과했던 위안화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시작된 직후부터 그 위상이 점증하여 23년도 1분기 기준 국제무역결제 대금 비중의 4.5%에 이르게 됐다.¹⁵⁾ 'CIPS'는 브라질의 기여분이 점차 누적됨에 따라 현재 국제무역결제 대금 비중의 84%에 이르는 달러의 권위에 실질적으로 대적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사우디와 이란이 중국을 통해 국교 정상화를 논의하기 시작함과 더불어 3월 14일부터 중국의 수출입 은행과 사우디의 국영은행 간 위안화 대출 협력이 공식화됨에 따라 중동의 '페트로달러' 위상의 저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2년 12월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 '알제리·아르헨티나·이란'이 BRICs 가입을 신청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터키 등도

12)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 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은 러시아, 이란, 인도 등 회원국 간 운송 협력 촉진을 목표로 설립된 복합 운송 회랑.

13) 2011년 포괄적 이란 제재법이 제정된 직후 이란의 2012 GDP 성장률은 -7.1%를 기록 및 cpi 26%(YoY)

14) 러시아 재무부는 2022년 12월30일 약 1865억달러 상당의 국부펀드(NWF)에서 위안화 비중을 기존에 비해 두배인 60%, 금은 4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개정

15) 중-러 간 위안-루블화 결제액은 2021년 1월 22억 위안에서 23년 1월 2010억 위안으로 90배 증가.

BRICs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어 BRICs 회원국을 중심으로 ‘탈달러화’ 기조가 심화되면, 미국의 달러패권은 약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및 환경, 인권 등’에 대한 중요성은 국제 논의의 변두리로 밀려날 것이다. 이미 국가의 발전 정도가 성장기를 거쳐 쇠퇴의 길로 접어든 서방의 선진국들이 주도한 ‘비경제적’ 레짐은 쇠퇴할 것이다. 패권 도전에 직면한 미국과 패권도전국(BRICs) 간의 대결은 ‘신냉전’을 넘어 ‘열전’의 형태로 치달을 수 있으며 금융·안보·식량·자원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된 사안들이 다시금 주요 논제로 대두될 것이다.

5. 비판점 및 결론

미국 중심의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 종속된 국가들의 발전이 저해되는 데 간접적으로 일조했다. ‘덜 성장된’ 국가에 자본이 조달되어 지구촌 공동체가 균형있게 성장하는 것이 아닌 ‘성장성’이 높은 나라를 위주로 자본이 쏠림 탓에 양차 대전 직전에도 낙후된 국가들은 수십 년간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성장 속도 간극을 좁히기 위해 미국 중심의 질서를 와해시켜 ‘양극·다극’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불균형한 세계 발전 정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앞서 서술한 ‘민주주의, 보편적 권리 등의 후퇴’를 차치하더라도 ‘경제발전의 균형’은 담보될 수 없다. 되려, 자유무역의 축소 혹은 경제블록화가 개도국으로부터 투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강 대 강’의 충돌을 통한 세계 질서의 붕괴 과정에서 무수한 파편과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으며, 설사 양강 체제가 정착한다고 해서 다극 체제로 이어지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다.

따라서 강대국(Great Power)이 도전을 통해 패권국(Dominant Power)의 지위를 탈환하는 데는 세계 질서 ‘교란’이 확실하나, 실질적으로 ‘도전의 명분’인 세계의 균형 갖춘 성장은 ‘제3 세계’에 어떠한 수혜를 가져다줄지 ‘불확실’하다. 다시 말해, ‘경제 지배의 논리’, ‘무한 경쟁의 논리’ 등에서 소외된 개발도상국이 세계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 질서 해체 및 재정렬’이 아닌 세계 ‘중심’의 다각화를 도모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세계 질서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과정에는 우선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서구 중심 질서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점과 ‘자본 제일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층위를 분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통해 ‘양극 체제 및 다극 체제’가 확립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일극 체제로 회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오히려 국가의 해체 및 세계정부 수립이 반영구적 지구촌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즉 지구촌의 발전 경로를 역행하여 전 반적인 삶의 수준을 퇴락시키기보다는 현 질서에서 거의 모든 국가 간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주적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순히 파괴 및 봉합을 통해 고질적인 ‘이기성’과 ‘이타성’ 간의 대립을 축소 시키려는 것이 아닌 ‘세계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간의 이타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여 근원적인 국가의 이기성과 ‘지속가능한발전’이 절충할 수 있는 ‘영역’을 끊임없이 모색 및 확대해야 할 것이다. 탈서구 중심주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대안은 이상론에 불과하며, 일극 체제는 타개 및 전복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문헌

기사문

- “대만 ‘온두라스와 단교’…수교국 13개국으로 축소”, 디지털타임스, 23년 3월 26일,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32602109919002005&ref=naver
- “미국 추종 대신 실용주의 추구, 127개 국가에 달한다.”, 민중의 소리, 23년 4월 16일 (<https://vop.co.kr/A00001631351.html>)
- “미국의 대중국 압박·건제에 맞서 中·브라질, 탈달러·다자주의 강화”, 서울신문, 23년 4월 17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17015002&wlog_tag3=naver
- “美 금융불안 파고드는 '위안화 굴기'…CIPS 이용액 22% 급증”, 세계일보, 23년 4월 3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5R9INEK>)
- 경제난 파키스탄, IMF 구제금융 협상 곧 마무리…"서명 임박", 연합뉴스, 23년 4월 1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4083400077?input=1195m>
- “국가부도의 날...약한 나라들이 소리없이 쓰러진다.” 조선일보, 23년 2월 23일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2/04/28/AKB2ILDGE5GXHADJITRIZR XUD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국가부도의 날...약한 나라들이 소리없이 쓰러진다.”, 조선일보, 23년 2월 24일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2/04/28/AKB2ILDGE5GXHADJITRIZR XUD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미국의 대중국 압박·건제에 맞서 中·브라질, 탈달러·다자주의 강화”, 파이낸셜 뉴스, 23년 4월 17일 <https://www.fnnews.com/news/202304171801352641>
- “사우디 브라질 등 ‘달러 말고 위안도 받아요’… 뒤통수 맞은 미국?”, 한국 경제, 23년 4월 18일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4134287b>
- 중국 러시아도 쓸어담는 금…역사적 신고가 쓸까, kbs, 23년 4월 13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50814&ref=A>
- 중국 방문 룰라 '탈달러' 강조…"왜 꼭 달러 사용하나?", sbs, 23년 4월 17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57622&plink=ORI&cooper=NAVER
- “러시아 · 인도, 경제부문 더 밀착…FTA 체결 논의 중”, SBS 뉴스, 23년 4월 17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5762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논문

- 강정인, 「반서구중심적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신아세아(NEW ASIA), Vol.23 No.2, 2016, p112-141
- 문성훈,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한 신자유주의 극복? 새로운 스미스 (A. Smith) 해석의 자기모순」, 현대유럽철학연구, Vol.0 No.60, 2021, p1-35
- 박치완, 「진정한 글로벌 가치란?」, 인문학연구, Vol.58 No.1, 2019, p237-262
- 박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대외경제 현황 및 대안분석」, Global Market

Report 23-006, p1-70

지주형, 「한국의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 역사적 변동과 형태분석」, 인문논총
Vol.41, 2016, p219-261

허철행,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한국적 적실성」, 지방과 행정연구, Vol.11 No.1, 1999,
p63-80

인터넷

“다가오는 공황: 이번엔 다르다”, 노사과연, 19년 4월 13일,

<http://lodong.org/wp/archives/9732>

(검색일 23년 4월 16일)

'달러패권 도전' 中 "사우디에 위안화 대출...무역결제에 사용", 한국무역협회, 23년 3월16일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73838&logGb=A9400_20230317

(검색일 23년 4월 19일)